

'93년 가전제품 특소세 개정(안)에 대한 가전 업계 건의

〈본회의 가전산업협의회가 1993. 9. 3 재무부건의〉

1. 재무부의 가전제품 특소세 개정(안)의 내용

재무부의 가전제품 특소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세탁기는 특소세 규정상, “가정형”의 규격(6kg 이하)을 초과하는 세척용량의 제품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오던 것을 개정(안)으로 20% 과세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다만, 기존에 과세되었던 소형(6kg 이하) 세탁기에 대한 세율은 20%에서 15%로 5% 세율을 인하했다.

또한 VTR에 대한 세율을 25%에서 20%로 5%로 인하했다.

재무부(안)에 따라 경우의 신규 세수는, 대형세탁기는 1,580억원 규모로 예상되나, 소폭 인하되는 소형세탁기 및 VTR의 세수 감소액은 317억원에 불과하며 '94년에는 1,263억원의 신규 세수가 예상된다.

○세율 및 세수변동

(단위: 억원)

품 목	현 행	개정(안)		
		'92 세수		'94 예상
○세탁기				
-6kg 초과	비과세	-	20%	1,580
-6kg 이하	20%	79	15%	62
○V T R	25%	1,214	20%	923

- 주 1. 세수는 특소세+교육세(특소세의 30%) 합계
 2. '94년 예상은 '92년 내수기준에 의한 예상치

2. 개정(안)의 문제점 및 파급 영향

1) 기본 방향에 관한 문제점

재무부 개정(안)은 소득수준, 소비형태, 품목간 형평 등을 감안하였다고 하나 가전산업의 현실과 과세 품목의 특성 및 특소세제 전반의 균형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하면 가전산업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91, '92년 연속 제조업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전업계의 경영 악화 및 대외 경쟁력 약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

매출액 대비 순 이익률

(단위: %)

구 분	'91	'92
제조업 전체	1.38	0.85
영상·음향기기	0.24	0.56
가전산업	△3.85	△3.65

자료: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이처럼 가전산업이 열악화된 주요 원인은, 외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가전제품 특소세가 국내 내수시장을 위축시키고 이는 기술개발을 위한 재 투자 여력을 감소시켜 첨단 기술제품의 개발 및 세계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본의 첨단 기술 제품과 아세안, 중국의 저가제품 사이에

서 고전(Squeeze-out)하는 상황)

C-TV 대미 수출추세

(단위: 백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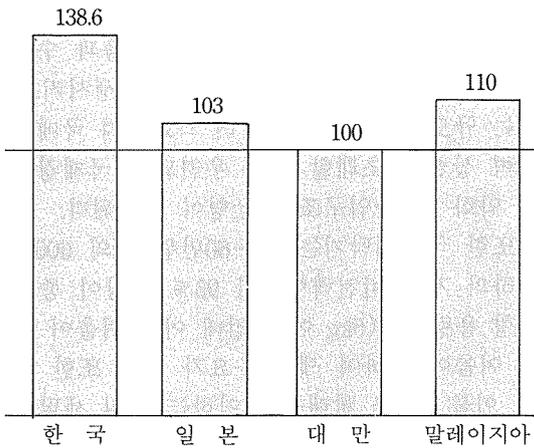
'88	'89	'90	'91	'92	'93.7
218	177	140	148	133	39
(-17.4)	(-18.3)	(-20.9)	(5.7)	(-10.1)	(-55.8)

각 국의 간접세 부과 현황

구 분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제세율
한 국	20%	30%	10%	38.6
일 본	3%			3%
미 국	주별 4~9%			4~9%
대 만	0%(무세)			
말 레 이 지 아	-	-	10%	10%

참고) 교육세: 특소세의 30%

제세율에 따른 소비자 가격 지수비교



그리고, 세탁기에 대한 특소세 부과 확대는 특소세 근본 취지에 배치되는데 세탁기는 가사 노동을 대체하며, 생활 문화의 향상에 따라 필수 가사 기기화된 제품으로서 일률적으로 사치성 재화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91	'92	'93(예상)
보급률	81%	85%	90%

소비전력 측면에서도 에너지 과소비제품이 아니므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중·대형 제품에 대한 추가 과세의 명분이 없다.

8.5kg의 세탁기를 주 3회 사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7Kw의 소비전력을 소비한다.(가 구당 월 소비량의 1% 미만: '92년 133Kw)

세탁기의 고급, 저급 구분은 용량 보다는 세탁방식, 기능 채용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kg 단위에 의한 대·소형 구분은 불합리하다.

* 국산: 6.2kg 모델: 315천원 → 5.2kg: 464천원

* 외산: 8.2kg 모델(미국): 980천원 → 5.0kg(영국): 1,897천원

따라서, 재무부 개정(안)에 따를 경우, 소비자 가격이 낮은 6kg 초과 세탁기에는 높은 세율(20%), 소비자 가격이 높은 소형세탁기에는 낮은 세율(15%)가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가사노동 절감을 위한 기기라는 측면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젊은 맞벌이 부부와 세탁 수요가 큰 야외 작업자 및 농어촌 가계에서 중·대형 선호도가 높은 반면에 잦은 세탁이 가능한 고 소득층은 소형 제품의 복수 구매형태를 보이고 있는 바, 용량기준에 의한 차별 과세는 저 소득층에 상대적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

특소세 과세대상 품목 전반에 걸친 과세 형평을 고려할 때, 생활 필수품인 세탁기를 사치품으로 간주하여 고율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품목간의 특소세율 비교

세탁기	승용차	호화가구
20%	10%	10%
(6kg 이하)	(1500cc 이하)	(향수류 포함)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직접세 분야 세율인하 효과를 간접세(특소세) 분야에서 보

전하려는 것은 징세 편의주의적이다.

금융실명제에 따른 고통 분담의 대가로서 직접 세율을 인하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에 따른 세수 결함을 과세 역진성이 강한 간접세(특소세)분야에서 보전하려는 것은 진정한 고통 분담의 실현이 아니라 세수 편의를 위해 직접적인 반발 없는 저 소득층에 부담전가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의 근로 여성이 수년간 저축 끝에 300만원 대의 혼수품(C-TV, 냉장고, 세탁기)을 장만할 경우, 60만원 이상의 특소세를 부담하게 된다.

2) 특소세 확대 부과시의 과급 영향

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먼저 세탁기의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이 증대되는데 6kg 이상 제품의 경우 15만원 이상의 가계부담이 증가한다.

(단위 : 원)

모 델	현행가격	20% 과세시 소비자가격	인상률
6.6kg	532,000	661,000(129,000)	24%
7.5kg	582,000	733,000(151,000)	26%
8.5kg	646,000	814,000(168,000)	26%

주) ()안은 추가 부담액

6kg 이하 모델의 경우, 비과세 규격제품과의 가격균형을 맞추기 위해 15% 이상의 원가 요인을 가전사가 자체 부담하고 있는 바, 전규격 과세시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하여 저 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된다. 신규 구입자의 90% 이상이 중·대형 세탁기 구입 추세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저 소득층인 신혼가계 부담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세탁기 전 규격의 과세시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것인데 단순 분석일 경우, 생산자 물가 0.078%, 소비자물가 0.096% 상승할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소형 제품의 가격 인상시,

0.1% 이상의 소비자물가의 상승이 예상된다.

다. 가전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전 3사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의 절대액수가 세탁기사업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고 가전 3사는 R&D 및 신제품 개발투자를 세탁기사업이익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각종 신형세탁기 개발 성공(삶는방식, 물방울 세탁기 등)이 전체 가전부문 투자마인드를 리드하고 있다.

따라서, 세탁기 전 규격의 과세에 따른 세탁기시장 위축은 전체 가전산업 경기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지대하여 가전업계의 경영악화 및 투자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대용량, 전자동 방식의 세탁기 수출이 '92년에 117% 증가, '93. 5월 현재 232% 증가 등 수출 부문에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이 『신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나, 대형제품의 신규 과세에 따른 내수 부진은, 결국 수출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대용량·전자동 방식이 세계적 조류인데, 대형제품 신규 과세는 국내용과 수출용제품 병행 생산의 이중구조를 발생시키고, 이는 규모의 경제를 더욱 더 약화시켜 국제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며 국제경쟁력 약화 및 산업구조 불균형이 발생된다.

또한 국산세탁기는 30~60만원 대의 600W 이하의 저 소비전력형이나 95% 이상이 중·대형 용량제품(6kg 이상)인데 이는 겨울이 길고 여름이 습하여 세탁 수요가 많고 또한 담요, 이불 등 큰 빨래를 많이하는 우리 세탁문화상 대형제품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산세탁기는 세탁력(용량), 소음 등 국산세탁기보다 성능은 낮으나 100만원대 이상의 고가이며, 3,000W 이상의 전력 다소비형이 주류이다.

따라서, 저가의 중·대형 국산세탁기에 대한 고율 과세 반면에 소형 외산세탁기에 대한 세율 인하로 인해, 고가의 유럽산 다소비전력형 소형세탁기의 국내시장 잠식이 확대되는

악영향이 예상되는 등 국내 시장에 외산 세탁기 침투 가속화를 초래할 것이다.

국산 및 수입세탁기 비교

원산지	용량 (kg)	소비전력 (W)	대수 (천대)	소비자가 (천원)	비고
미국	9.1	650~750	5.5	980	-
유럽	5.0	1,900~3,300	14.1	1,897	드럼식
일본	4.5	380	0.1	648	-
한국	8.0	460	-	613	-

3. 가전업계의 애로 건의

1) 국내 소비실태 및 조세형평을 고려한 특소세 비과세 인하 조정

중·하류 계층이 사용하는 생필품(세탁기, 음향기기) 성격의 가전제품과 보급률이 높고 대중화된 제품은 비과세하고, 기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

- 냉장고 : 소형(비과세), 대형(15%로 인하)
- C-TV : 소형(비과세), 대형(15%로 인하)
- V T R : 15%로 인하

또한 과다전력 소모제품은 현행 수준을 유지(에어콘, 프로젝션 TV)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소비자 구매실태, 선진국의 국제상품 분류 사례를 감안한 과세대상 물품의 기준 조정

C-TV는 21"를 기준으로 소형, 대형으로 구분하고, 냉장고는 400ℓ를 기준으로 소형, 대형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처럼 재무부의 '93년 가전제품 특소세 개정(안)에 대한 가전업계의 의견을 건의하는 것은 가전업계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투자 활성화 및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여 영세 중소기업·하도급 업계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정부의 물가 안정화 시책에 부응한 공산품 가격 동결로 고통분담에 동참하며 국내 시장 수요 촉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건의하게 된 것이다.

**세계속의 한국은
세계속의 기술로부터**